

## 금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축소

금년 10월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때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대폭 축소되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는 사유가 확대된다. 지난 7월 26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형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이 개정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시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원도급 건설사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면제대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해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182개 업체가 지급보증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10여개 사로 면제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모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을 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는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2회분 이상 지연할 경우 각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직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행정부, 지자체 전자입찰 추진요령

금년 11월부터 235억원 미만의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와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 내용은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 추진요령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MS) 이용약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조달청의 GoB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집행기관 명의로 입찰집행관 등록을 해야 하고, 입찰집행 건수가 많고 업무가 구분될 경우에는 복수의 인증서 관리를 해야 한다.

등록 받은 인증서 폐기, 복사, 변경 등

은 공인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고 인증서의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책임자를 지정·보관한다.

GoBMS로부터 암호화 인증서를 발급(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관리하고 입찰서를 송신할 때 암호화, 개찰할 때 복호화 등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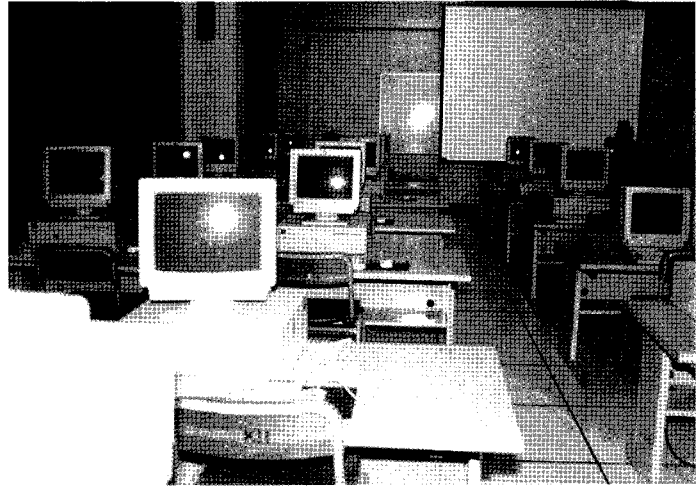
암호화 인증서는 개찰이 종료될 때까지 복사본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으며, 암호화 인증서는 각 입찰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찰에 완료된 압  
호화 인증서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GoBMS가 확인하는 입찰참가자  
격(중복투찰 자동방지, 부정당·영  
업정지업체 입찰참여 자동금지 등)  
외에는 지역이나 실적 등 자격제한,  
현장설명 참가여부, 공종이나 면허  
사항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수기입찰의 경우와 같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입찰참가자들은 웹브라우저 IE5.0  
(Inetemet Explorer : Microsoft  
Windows 98에서 제공하는 브라우  
저여야 한다) 이상을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  
PC를 보유해야 하고, 인터넷 접속환경은 56kb모뎀  
환경 이상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  
(기존 등록정보 외에 전자입찰을 위한 대표자 메일  
주소 등 추가정보 등록) △전자서명인증서 신청/발  
급(공인인증기관) △전자입찰 이용약관 확인(입찰  
차용)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해 금융결제원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아 해당 PC에 설치  
해야 한다.



찰 공고시에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입찰서 접수개시일시는 공고일(관보, 신문광고 등)  
이후로 하고, 개찰일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와 10  
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선택한다. 입찰서 접수는 전  
자서명 확인, 도달시간 확인 등 여러 확인작업을 거  
치므로 마감직후 개찰할 경우 개찰에 오류발생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입찰시간 설정은 가능한 한 업무시간 중으로  
하고, 개찰일시 분산으로 시스템 부하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입찰공고

### ① 지방자치단체

GoBMS에 공고된 입찰의 정정 공고 및 취소 공  
모가 가능 하나 입찰개실 일시 이후에는 정정 공고  
가 불가능하다.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집행관은 공  
고내용이 인터넷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자입

### ② 입찰참가자

해당 입찰공고 번호를 클릭하여 공고서를 조회한  
다. 이때 공동수급항목, 수수료항목, 투찰항목을 클릭  
하여 입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공고 현황 상세조회에서 제출시작일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여 여유 있게 제출(마감시간 직전 업무  
량 폭주 예방)하도록 한다.

■ 투찰

① 입찰참가자

모든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동이행과 담보이행에 모두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번 제출(공동분담)한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업체 조회」 메뉴에서 대표업체는 구성업체들이 전송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하여야 공동수급협정서가 투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표업체 승인 전에 작성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업체지급 계좌사항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클릭한다.

입찰서 작성(투찰)과 관련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반드시 입력하고 「입찰금액」란 첫 번째 항목을 숫자로 입력시 두 번째 항목에는 작성한 금액이 한글로 자동 입력된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재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복수예비가격

① 지방자치단체

복수예가입력은 파일을 통해 일괄적으로 입력(TXT파일 형식)하고, 공고번호, 차수,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순으로 입

력한다.

입력된 금액이 원래의 예비가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오류가 발생할 시 수정·입력조치를 한다.

② 입찰참가자

입찰서에서 「송신」 버튼을 클릭한 후 예가번호를 추첨(복수예가인 경우)한다. 각각의 버튼은 내부적으로 사전 작성된 예비가격을 갖고 있으며, 매번 그 위치가 무작위로 변하게 된다.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

개찰이 종료된 후 낙찰예정자 선정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개찰 결과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친 후 최종낙찰을 선정하여 공고한다.

② 입찰참가자

개찰 완료된 입찰공고건에 대한 복수예가(추첨결과) 및 예가가격조화가 가능하며, 업체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한글),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조달청에 정보변경 등록과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등록정보 변경을 해야 한다.

## 정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

금년 하반기부터 오는 2003년까지 3년간 전국 496개 지역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금년 238개 m지역, 2002년 136개 지역, 2003년 7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면적은 2만3천815km<sup>2</sup>, 24만8천290가구에 이른다.

다음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것이다.

### ■ 사업대상지역 선정

원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지구는 가능한 모든 지역을 선정하고, 신규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이 불량한 지역을 선정했다.

금년 1월 이후 지정 예정인 신규지역은 주택노후화 정도가 60% 이상이고, 도로의 50% 이상인 4m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하수도시설 미비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극히 우려되는 경우 하수도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상 국고지

사업지역대상 선정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645개 지역 중 기집행지역 10곳, 선정기준 미달지역 120곳, 사업효과 미흡지역 13곳 등을 제외한 496곳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금년 238개 지역이 착



수되고 2002년에 136개 지역, 2003년에 77개 지역이 사업에 들어간다.

대상지역면적은 238억1천563만6천㎡, 14만 9천 242개 동, 24만 8천 290tpei 82만2천997명에 달한다.

이번 국고지원으로 3년내 전국의 도시내 노후·불량주거지내 도로 2.3km가 개설되고 상하수도 587km가 완비되는 등 기반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집 및 노인정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연도별 사업계획

이중 금년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이전부터 사업이 착수된 지역 등 당장 사업시행이 가능한 기존지역은 모두 선정하고 신규지역은 연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283개 지역에 9천600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 사업대상시설 현황

사업대상시설은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로는 실질적인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고,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소규모에 한정한다.

복지시설은 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관리가 용이한 탁아소, 어린이

[3년간 추진할 시·도별 지역수와 사업비]

지 역	수	사 업 비
서울	49	1천47억600만원
부산	87	2천630억1천만원
대구	29	830억7천900만원
인천	31	1천131억1천100만원
광주	29	832억4천200만원
대전	28	1천255억1천만원
경기	30	914억2천800만원
강원	21	750억800만원
충북	12	409억900만원
충남	14	536억3천만원
전북	38	1천158억6천300만원
전남	52	2천140억5천800만원
경북	21	643억5천600만원
경남	33	1천149억2천200만원
제주	25	57억원

## 대한주택공사, 고급마감재 · 레벨링공법 적용

대한주택공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전용 25평 이상 분양아파트의 거실바닥을 강화마루를 끼는 등 마감재 고급화와 골조의 수평·수직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레벨링공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파주와 금촌지구 978세대를 비롯해 천안 백석 등 10개 지구 4천590세대에 강화마루를 적용하는 등 마감재를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도 파주·금촌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천 세대 이상을 강화마루를 적용할 방침이며, 골조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평·수직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레벨링공법을 7천 세대 정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레벨링공법은 주공이 몇 년 전부터 시범적용을 해온 결과 골조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등 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그간 주공아파트가 골조는 튼튼하나 마감재가 민간아파트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오며 따라 전용면적 25평 이상 분양아파트의 경우 민간아파트와 경쟁한다는 차원에서 마감재를 고급화하기로 한 것이다.

마감재 고급화의 중점내용은 거실바닥에 비닐장판을 깔던 것을 강화마루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입주하자마자 비닐장판을 걷



어내고 나무마루로 바꾸는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 레벨링공법과 관련하여 「아파트 골조공사의 품질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수평·수직이 기본」이라면서 「종전에는 수평구조의 정확성이 떨어져 층간 높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자동 레벨링공법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평·수직 문제의 현저한 개선과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하반기 건설경기전망 · SOC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SOC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증가세로 반전되나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60조7천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일시적인 응급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SOC 투자확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내용은 이날 발표된 주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 하반기 건설경기 · 부동산시장 전망

금년 하반기 건설수주(일반건설업체 계약금액, 경상금액 기준)는 7.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반기 5.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수주액을 합치면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60조7천200억원의 규모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공공, 토목 건설수주가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크게 감소

한 주거용 건축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년 1/4분기 중 1.4%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한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1.5%, 하반기 중에는 2.7% 내외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2.2% 증가한 70조6천200억원 내외를 기록할 것이다.

비록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건설투자가 금년에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된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1998년의 급격한 건설수주의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의 파급효과가 축소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건설물량 규모의 증대에 따



른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해 17.6% 증가한 건설수주가 금년에는 1.0% 내외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반기 토지거래는 판교신도시 개발 발표 등에 힘입어 경기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가는 상반기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 0.5%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신규공급의 저조에 따른 물량부족과 금융·세제지원, 저금리 현상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증대로 가격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의 순환변동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시장은 금년 2/4분기를 고비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상반기 중 서울시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며,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4~5배 가량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이 25.&평 이하의 신규주택에 집중됨으로써 중·소형을 중심으로 미분양 및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금년도 규모는 1997년의 각각 76%, 79% 수준에 그쳐 IMF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아직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윤기 부연구위원)

## ■ SOC 투자동향과 정책과제

지난해 4/4분기부터 본격화된 실물 경기의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국내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저·하고」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는 3%대 중반에 머무는 반면 3/4분기 중에 저점을 지나 하반기에는 4% 초반으로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둘째는 「저성장·고물가」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은 연간 4%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물가 상승률은 4%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과 더불어 물가 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을 지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여 산업생산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통화량 증가의 통화정책과 SOC 투자증대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원의 정책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1997~2000년을 대상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통화량 증가는 SOC 투자증대에 비하여 경제성장과 실업감소효과는 연간 각각 5.3%와 6.3%에 불과한 반면 물가상승효과는 4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상승의 압력이 크지 않은 SOC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단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SOC 투자증대는 산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제 경쟁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산업생산의 둔화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생산성의 향상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생산기반의 물적자본을 이루는 SOC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SOC의 수준은 세계 주요 49개국 중 29위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SOC정책의 기초는 지속적인 투자증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착공과 완공 사이의 시차를 감안할 때 SOC 투자는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 계획과 더불어 경제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며, 정책 기초와 더불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의 목표 지향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의 효율성은 수단, 효과 및 시기에 의하여 좌우된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고물가의 상황에서 실기할 경우 10년이 넘게 경기침체의 국면에 허덕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의 적정 SOC 투자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책 모의시험 결과 2001년 예산에 대비하여 5조원까지 증액하여도 물가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황세중 연구위원)

